

#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물부  
소식



## 추석(秋夕) 전·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실시

### 위반 업소는 엄중 처벌 할 것

### 위반 업소는 엄중 처벌 할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

일)은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 지난 8월 25일~9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17,370개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477개소를 적발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280건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97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허위표시 : 형사입건(판매·가공업체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식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미표시 : 과태료부과(1천만원이하)

이번 단속에서 수입쇠고기(142건), 수입돼지고기(67건)를 국산 등으로 둔갑시킨 위반사범이 많았고,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칠레산 등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9.13까지 추석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표시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추석이후에도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동원,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둔갑판매 수법에 대응하여 유전자 감식 등 최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하는 등 끝까지 단속하고, 악의적·상습적 원산지 허위표시 업자는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원칙적 구속수사를 하여 엄

중 처벌하는 한편, 인·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판매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확인”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하는 경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은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 지난 8.25부터 9.10까지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17,370개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477개소를 적발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280건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97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소식



## 이주호 신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종합수의서비스 제공 최선”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종합수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수

의전문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6일 제5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취임한 이주호 신임 원장의 일성이다. 이주호 원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국민들이 건강 및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높은 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를 거울삼아 검역원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

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내 최고의 수의전문기관으로 맡은 바 소명을 다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검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직장내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에 주력하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민원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화된 기관에 걸맞는 업무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30여년의 공직생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주어진 책무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소식



### 국제 동물복지 현황 및 동향에 관한 심포지엄 열려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 주관으로 9월 19일 한국농업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의 목적은 국내·외 동물 복지기준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국내에도 농장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의 개념을 정착시켜 국내 농장 동물복지 수준 향상 및 사양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최됐다.

동물복지의 개념은 동물에 대하여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영국을 비롯한 EU국가에서는 이미 모든 동물에 대한 복지개념이 확실히 자리를 잡아, 식재료로 이용되는 고기의 경우에도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처럼 높은 신뢰도와 가격을 인정받고 있다. 애원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 관리에 있어서 사람의 책임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이 법적으로 통용되고 있다.(예. 공원산책시 목줄, 오물 수거봉투 지참의 의무 등)

이번 심포지엄의 가장 큰 의미는 앞으로 진행될 한·EU FTA에 대비하여 동물복지문제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국제적 기술동향이나 요구수준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역할 모델을 발굴하여 1999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실제 농가단위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한국형 동물복지모델을 창출한다는 데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내용으로는 일본의 동물복지 시책과 연구동향, 영국의 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동향, 네덜란드 및 EU의 동물복지 법률과 네덜란드에서 이행 등의 외국 사례와 동향이 발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동물복지제도와 정책과제(최염순 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의 동물복지 연구동향(전중환 박사, 농진청 축산과학원), 동물복지와 안전축산물 생산(조재진 팀장, 축산물 HACCP기준원)의 국내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의하면, “동물복지 개념을 적용할 경우 현재 생산비의 1.8~2.5배에 이르는 경영비 부담이 생길 수 있으나 세계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는 선진국 등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지금부터 차분히 관련 법령과 농가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10년 후를 준비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 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문의】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유용희, 전병수 ☎031-290-1728